

2016년 4월 9일 국가직 9급시험

행정학개론 (해설 : 이명훈교수)

<<총평>>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 국가직 9급 행정학은 다소 생소한 주제에 대한 문제가 3~4 문제 출제되어 체감상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은 좋은 점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출제영역을 보면 행정학총론 3문제, 행정환류론 1문제, 정책학 5문제, 조직론 2문제, 인사행정론 3문제, 재무행정론 4문제, 지방행정론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정학의 전 영역에서 고른 출제였다고 볼 수 있지만 예년과 달리 행정학 총론과 조직론 문제가 다소 적게 출제되고 재무행정론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둘째, 문제의 난이도 측면에서 과거에는 출제된 적이 없는 다소 생소한 분야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분야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2번 국제 징수액 비중(수업시간에 여러 번 우리나라 조세부분의 문제점을 언급해서 하이패스 행정학 수강생들은 쉽게 해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 6번 조직시민행동, 문제 7번 정책변동모형(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문제 13번 집단사고(수업시간에 개념을 충실히 학습했다면 쉽게 해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 16번 행동강령(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문제 17번 조직의 조정기제(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등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과거의 것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고 다음 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출제영역 : 행정학 총론, 난이도 : 하)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서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답) ① 설문은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 156)

<<핵심체크>> 가외성

개념	행정체제가 기본 구성요소 외에 잉여요소를 갖는 것(Landau)	
가외성 장치	- 가외적 장치인 것 : 권력분립, 양원제, 거부권 행사, 위원회제도, 순차적 결재(품의제도), 삼심제도, 계선과 막료, 복수목표 추구, 분권화 등 - 가외적 장치가 아닌 것 : 만장일치, 집권화, 계층제 등	
구성요소	중첩성	동일 행정기능을 여러 행정기관이 상호의존적으로 수행하는 것
	반(중)복성	동일 행정기능을 여러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동등참여력	주된 조직단위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적 단위기관이 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것(등전위현상)
근거	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정책결정, ② 조직의 신경구조성, ③ 조직의 체제성(신경구조성), ④ 타협과 협상의 사회	
기능	① 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 증진, ② 정보의 정확성 증진, ③ 체제의 적응성과 대응성 증진, ④ 체제의 창조성과 다양성 증진, ⑤ 목표의 전환 방지, ⑥ 체제의 수용능력 증진	
한계	① 감축관리(능률성)와 충돌가능성 - 관료제 팽창의 근거로 오용, ② 갈등 증폭 및 책임·한계의 모호성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출제영역 : 재무행정론, 난이도 : 중)

- ①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②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③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 ④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

(답) ④ 우리나라는 현재 부가가치세(57조) - 소득세(54조) - 법인세(43조) 순으로 비중이 크다. (하이패스 행정학 p 708)

<<핵심체크>> 국세의 구성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 세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출제영역 : 인사행정론, 난이도 : 하)

-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답) ③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직무의 난이도·책임도등이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 594)

<<오답정리>>

- ① 직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 ② 직군은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 ④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핵심체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직위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직위의 수와 직원의 수 일치)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직급의 수는 직위의 수보다 적음)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직류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형적 군(우리나라 실정법상 계급).
직무등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고위공무원단과 외무공무원에게 적용)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출제영역 : 재무행정론, 난이도 : 중)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 ②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답) ①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수입대체경비라 한다. 「국가재정법」은 수입대체경비, 국가의 현물출자, 전대차관 등을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 788)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인사행정론, 난이도 : 중)

- ① 전(全)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악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

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답) ③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은 경력경쟁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며 대통령이 한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대통령이 가진다.(하이패스 행정학 p 611)

<<핵심체크>> 고위공무원단

구성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이 높은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군
대상직위	-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부 각급 기관의 직위 중 실·국장급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지방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지 않음) -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상당하는 직위(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 포함
진입	일반직의 경우 후보자 교육(Action Learning) 이수과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되며, 인사심사(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임용
임용	경력경쟁채용(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승진임용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며 대통령이 함.
인사관리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어 범정부적 통합관리의 대상이 되며, 각 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인사권과 복무감독권을 행사
정원관리	계급(관리관, 이사관 등)이 폐지되고 직위의 직무 값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등급 또는 직위에 의해 합리적인 보수지급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짐.
충원	각 소속 장관별 개방형 직위(20% 이내), 부처간 공모직위(30% 이내), 기관자율직위
보임기간	최소한 2년 이상 해당직위에 재직
근평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함. - 고위공무원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하되, 부처별로 최상위등급의 인원비율을 20% 이내로 하고 하위 2개 등급(미흡 + 매우 미흡)의 인원비율을 10% 이상으로 해야 함.
보수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기준급과 직무급]과 성과연봉[성과급]의 결합)
검증	- 의의 :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부진자의 퇴출을 강화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적격심사 실시 기관 :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 적격심사대상 : ㉠ 근평에서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 근평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 과정 :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격심사의 대상 사유에 해당하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는 대상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함(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 :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과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직권면직 가능).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정년 등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며, 정치적 중립 및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가급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조직론, 난이도 : 상)

①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 ②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④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행동에 속한다.

(답) ②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조직인이 자신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 복리에 기여하는 행동을 말한다. 절차 공정성 지각과 분배 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역할 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핵심체크>> 조직시민행동

의의	조직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요구되는 의무 이상의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행동(조직원들이 조직을 위해 보이는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행동)
선행 조건	직무 만족, 조직 몰입, 공정성에 대한 지각, 상사와 긍정적 관계, 전염성, 성격 변인(책임감, 외향성, 긍정성 및 이타주의적 성향 등)
유형	• 이타적 행동 :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와주려는 도움행동 또는 친사회적 행동 • 양심적 행동 : 조직이 요구하는 이상의 봉사나 노력을 하는 행동 • 예의적 행동 : 자신 때문에 타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방해하지 않으려는 행동 • 신사적 행동 : 타인에 대해 악담하거나 단점을 말하지 않는 행동 • 공익적 행동 : 조직활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려는 행동
관계	절차공정성 지각 및 분배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출제영역 : 정책학, 난이도 : 상)

-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답) ③ 설문은 정책지지연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하이패스 행정학 p 371)

<<핵심체크>> 정책변동 모형

정책흐름모형(Kin-don ; 전통적 정책변동모형)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지지연합모형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특히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Hall)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단절균형모형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협착(제도의 정체상태)을 강조하며, 정책변동(제도변화)은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강력한 외부적 충격(중요한 분기점)에 의해 단절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행정학총론, 난이도 : 중)

-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답) ③ 빅데이터(3V)란 방대한 규모(Volume : 크기), 짧은 생성주기(Velocity : 속도), 다양한 형태(Variety : 정형적, 비정형적 데이터의 집합)를 지닌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 193)

<<핵심체크>> 빅데이터(3V)를 활용한 스마트 전자정부

빅데이터 (3V)	개념	방대한 규모(Volume), 짧은 생성주기(Velocity), 수치화된 데이터, 문자 또는 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Variety)를 지닌 대규모 데이터
	기법	•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 인공지능기법 등의 활용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지식발견기법
스마트 전자정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회현상에 관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여 미래예측·변화추이·위험징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재난의 사전예방), 각각의 개별적인 시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전자정부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재무행정론, 난이도 : 중)

-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답)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든 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하이패스 행정학 p 780)

<<핵심체크>> 예산심의

의의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검토하고 의결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
기능	① 정책형성 기능, ② 행정부의 감시·통제기능, ③ 당파적 이익이나 지역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 ④ 한정된 가용자원의 합리적 배분 수단
한계	• 한계적 조정과 수동적 역할 : 정책이나 사업의 근본적 변경보다는 예산금액의 한계적 조정에 치중(대부분 1% 내외에서 수정됨) • 선형성과 점증성 : 국회의 예산 승인액과 다음연도 행정부의 예산요구액 간에는 선형적 함수관계를 이룸
절차	① 국정감사 ⇒ ② 대통령의 시정연설 ⇒ ③ 상임위의 예비심사(상임위와 부처는 예산 팽창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비영합 게임의 관계 형성) ⇒ ④ 예결위(상설위)의 종합심사 ⇒ 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헌법상 예산심의 기간은 60일, 국가재정법상 예산심의 기간은 90일)
우리나라의 특징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보다 예산심의가 보다 엄격 • 위원회 중심 예산심의 :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의 예산심의 •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팽창지향성을, 예산결산특별위의 종합심사는 감축지향성을 지님. 다만,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예산 및 기금의 수정권한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나 새 비목을 설치하지 못하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정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폐지·삭감권만 지님) • 기타 : 예산의결주의, 심의과정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아 예산증액 야기, 심의기간 도과 빈번 등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정책학, 난이도 : 중)

- ①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 ②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 ③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 ④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 (답) ④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면, 이슈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의 존재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 282)

<<핵심체크>> 정책커뮤니티(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구 분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참여의 특징	폐쇄적이며 제한적 참여	광범위하며 개방적인 참여
주요 참여자	정부관료, 전문가, 학자, 국회의원 보좌관, 신문기자, 연구원(단순한 이해관계자 배제)	관련된 모든 이익집단, 전문가, 개인, 언론 등(단순한 이해 관계자 참여)
참여자간의 권한과 자원배분	모든 참여자가 상호교환 할 수 있는 권한 및 자원을 보유하며, 참여자간에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공유함	참여자의 일부만 자원 및 권한을 보유하며, 상황에 따라 중요한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주도적 행위자도 변함
참여자간의 관계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이며,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이며, 상호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
권력과 게임의 유형	참여자 간의 권력이 균형적이며 positive sum game(non zero sum game)이 이루어짐	참여자간의 권력이 불균등하며 negative sum game(zero sum game)이 이루어짐
상호 작용	안정적이고 질서적이며 상호작용이 빈번함	불안정적이고 무질서하며 접촉의 빈도가 가변적임
정책산출	의도한 대로 정책산출이 가능하므로 예측이 용이하며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가 유사	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이 변동하므로 정책산출의 예측이 곤란하며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가 상이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출제영역 : 재무행정론, 난이도 : 하)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답) ①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이패스 행정학 p 721)

<<핵심체크>> 예산불성립시 예산제도

종 류	기 간	국회의 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준예산	제한 없음	불필요	한정적	한국, 독일
잠정예산	제한 없음	필요	전반적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가예산	최초 1개월	필요	전반적	프랑스, 한국의 제1공화국

<<핵심체크>> 준예산

의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 의회의 승인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
적용경비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운영비(공무원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 ②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등
현황	2공화국 때 채택되었으나 정부차원에서 단 한 번도 준예산이 편성된 적 없음(다만,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편성된 바 있음) 다만, 가예산은 1공화국때 거의 매년 편성됨.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지방자치론, 난이도 : 중)

-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답)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 870)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 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정책학, 난이도 : 상)

- ①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 ③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 ④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답) ④ 집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종 대안이 도출한 후에도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 353)

<<핵심체크>> 집단사고

의의	개인들이 집단 응집성과 합의에 대한 압력으로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어 각자의 의견을 발현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현상(만장일치에 대한 도덕적 환상, 집단동조주의 등)
예방전략	•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모든 제안에 대한 반론과 의문을 제기하도록 권장한다. • 리더가 자신의 선호를 표명하는 것을 삼가하거나 표방한다면 최후에 말해야 한다. •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집단토론에서 나오는 구성원의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도록 고무시킨다. • 집단을 여러 개의 하위조직으로 나누어 각각 토론하도록 한 다음 다시 모여서 차이를 조정한다. • 회의 때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다른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비판만 하는 역할을 한다. •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회의를 반복해서 실시한다.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행정학 총론, 난이도 : 중)

- ①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 ②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③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답) ④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요인(무능력, 도덕적 해이 등)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물적·제도적 제한으로 인한 경직성 등) 및 시민들의 과다한 요구 등에 의해 발생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 34)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출제영역 : 정책학, 난이도 : 하)

정부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의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그런데 두 측정시점 사이에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① 상실요인(mortality)

② 회귀요인(regression)

③ 역사요인(history)

④ 검사요인(testing)

(답) ③ 설문은 역사적 사실(역사요인, 사건효과)에 대한 것이다. 역사요인이란 실험기간 동안에 실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쳐 실험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소를 말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 385)

<<핵심체크>> 정책평가의 타당성 저해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요 인	선발요소 (선정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개인들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견(외재적 요소)
	역사적 요소 (사건효과)	실험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쳐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성숙효과 (성장효과)	평가에 동원된 집단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상실요소 (이탈효과)	실험대상자들이 연구기간 동안에 이사·전보 등으로 이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편견
	회귀인공요소 (통계적 회귀)	실험 직전의 측정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는 달리 유별나게 좋거나 나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경우 이들이 실험 진행 동안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발생하는 편견
	측정도구의 변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 전과 집행 후에 측정하는 절차나 측정도구의 변화로 발생하는 편견
	측정요소 (검사요소)	실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험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측정이 실험실시 이후 실험집단의 측정점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편견
	오염효과 (모방효과)	통제집단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견
	기타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역사적 사건의 상호작용, 처지와 상실의 상호작용 등
외적 타당성 저해요 인	호오돈 효과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실험집단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에 어떤 편견이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집단이 실험 조작을 작용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 받은 경험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표본(표본추출)의 비대표성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선정된 실험집단(표본)이 사회적 대표성이 없는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크리밍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험을 실시할 경우 일반화의 어려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에 여러 번 실험적 처리를 한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나타나는 효과로 인한 일반화의 어려움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행정환류론, 난이도 : 상)

-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답) ④ 행동강령이란 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를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행동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의 집합체이다(①).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강령이라 한다(③). OECD는 1998년 윤리관리원칙을 발표하고 각국의 윤리기준의 법제화를 강조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동강령을 윤리법과 달리 시행령(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④).(하이패스 행정학 p 231)

<<핵심체크>> 행정윤리의 관리

행동강령 (광의)	개념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명문화한 공무원 집단들의 열망이나 행동방향에 대한 안내의 집합체(사전안내와 관리)
	유형	• 윤리강령 :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규범성 -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선서, 공무원윤리헌장) • 행동강령(협의) : 윤리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어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행동의 표준으로 작용하는 지침(규범성과 실천성-공직자행동강령) • 실천강령 : 행동강령(협의)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동강령(실천성)
윤리법	개념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의 형태로 규정한 것
	유형	공직자윤리법(사전예방), 사후처벌(부패방지법) 등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조직론, 난이도 : 상)

- ①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 ②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으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 ③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 ④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답) ① 데프트(Daft)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통합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 427)

<<핵심체크>>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Daft)

수평적 기제	의의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 방법
	방법	정보시스템, 직접접촉(연락담당자 지정), 임시사업단(TF), 프로젝트 매니저(통합관리자), 프로젝트 팀, 위원회나 회의, 상위통합기구의 활용 등
수직적 기제	의의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을 통제·조정하는 방법
	방법	계층제의 활용 또는 계층직위의 추가, 규칙과 상위계획의 마련, 수직정보시스템(정기보고, 문서화된 정보, 정보통신시스템)의 활용 등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출제영역 : 인사행정론, 난이도 : 중)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ㄴ.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답) ④ ㄱ은 분류법(B), ㄴ은 요소비교법(D), ㄷ은 서열법(A), ㄹ은 점수법(C)에 대한 설명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 596)

구분	특징	비고
비계량적 인 방법 (직무 전체를 포괄적으 로 판단)	서열법 - 직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 평가방법(단순서열법, 쌍쌍비교법) - 소규모조직을 제외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음	직무와 직무의 비교(상대평가)
	분류법 (등급법)	직무와 등급기준표의 비교(절대평가)
계량적인 방법 (직무의 구성요소 를 선정하여 평가)	점수법 - 평가요소별 점수를 부여한 직무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직위를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각 직위의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직무와 직무평가기준표의 비교(절대평가)
	요소 비교법	직무와 직무의 비교(상대평가)

ㄷ. 하위정부론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illegible]

③ L, C

④ G, L, C

(답) ② 하위정부론은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의회 상임위원회와 해당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당은 하위정부의 구성요소가 아니다.(하이패스 행정학 p 281)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출제영역 : 지방자치론, 난이도 : 중)

-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답) ② 티부(Tiebout)모형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하이패스 행정학 p 824)

<<핵심체크>> 티부(Tiebout) 모형

의의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분권화체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하에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발로하는 투표(vote by foot)'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의 결과 지방정부의 경영은 보다 건전해지고 효율화된다고 보는 이론(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재정논리)
배경	• 사무엘슨의 이론에 대한 반론 : '공공재는 분권적인 배분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중앙집권적·일방적 과정을 통하여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사무엘슨의 이론에 대한 반론임.
기본 가정	• 완전경쟁하의 시장의 가정 : ① 다수의 지방정부의 존재, ② 완전한 정보, ③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가능성 및 완전한 이동(거래비용=0), ④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규모수의 불변의 원리), ⑤ 외부효과와 부존재, ⑥ 국고보조금의 부재, ⑦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⑧ 최적 규모의 추구(지방정부는 최저평균비용으로 지방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추구), ⑨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로 충당, ⑩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등
결론	• 효율적인 자원배분 •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적 집적 현상
한계	• 지역 간 이질성 심화로 인한 형평성 저하 •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불고려(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만 강조) • 가정의 비현실성(완전경쟁시장의 가정)
정책적 함의	•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이나 보조금의 확대는 효율성이라는 티부가설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 저하라는 티부가설의 한계를 방치하는 결과가 야기됨. •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생활의 광역화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완화하고 이전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티부가설의 설득력을 높임.

